전쟁기념사업회
나라를 **지**키는 **포**럼

제15회 KWO 나지포럼

일시 2026.6.26.(금) 14:00~16:00

장소 전쟁기념관 3F 워리어 라운지

역사로 본 자주국방

주제발표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

종합토론
김종대 (前 국회의원)
김기섭 (군사편찬연구소장)

포럼기획 전쟁기념사업회 W-아카데미
작성책임 서진아 학예연구사 (02-709-3174)

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

제15회 KWO 나지포럼

역사로 본 자주국방

제15회 KWO 나지포럼

역사로 본 자주국방

일시 : 2026년 6월 26일(금) 14:00~16:00
장소 : 전쟁기념관 3F 워리어 라운지
주최 : 전쟁기념사업회

발표주제와 순서

구분	시간	내 용
등 록	13:30~14:00	등록 및 자료집 배부
개 회	14:00~14:05	【사 회】 서진아 (전쟁기념관 학예연구사)
주제발표	14:05~14:25	【발 제】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
종합토론	14:25~15:30	【좌 장】 김낙진 (전쟁기념사업회 사무총장) 【토 론】 김종대 (前 국회의원) 김기섭 (군사편찬연구소장)
	15:30~15:50	【Q&A】 질의응답
기념촬영	15:50~16:00	기념촬영
폐 회	16:00	폐회선언

〈목 차〉

【주제발표】

역사로 본 자주국방: 국민주권 국방을 향한 대전환

▶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 ……7

【종합토론】

김종대 (前 국회의원)

김기섭 (군사편찬연구소장)

역사로 본 자주국방

국민주권 국방을 향한 대전환

정 한 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

1. 서론: 왜 다시 자주국방인가

자주국방은 한국 현대사의 오래된 과제이다. 전쟁의 경험, 한미동맹의 형성, 산업화와 방위산업의 성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미중 전략경쟁, 인공지능과 무인체계의 확산은 모두 자주국방의 의미와 방향을 다시 묻게 만든다. 오늘날의 자주국방은 과거의 구호를 반복하는 일에 그쳐서는 안 된다. 변화한 안보환경 속에서 한국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준비하며,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국가를 세웠고,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생존과 성장을 이뤄왔다. 그 과정에서 동맹은 한국 안보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 지위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동맹의 존재가 한국의 책임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동맹은 억제의 큰 틀을 제공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한국군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며, 어느 속도로 대응할 것인가는 결국 한국 자신의 능력에 달려 있다. 자주국방은 동맹을 약화시키자는 주장이 아니라 동맹을 더 성숙하게 운용하기 위한 능력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오늘의 안보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복합적이다.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해 있고, 주변에서는 미중 전략경쟁, 대만해협 긴장,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 해상교통로 위기가 서로 맞물려 있다. 안보와 경제, 군사와 기술, 동맹과 산업정책의 경계도 흐려졌다. 반도체, 배터리, 위성, 인공지능, 통신망, 핵심광물, 해상물류가 모두 국가안보의 영역에서 설명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자주국방은 병력 규모나 무기 수량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자주국방의 기준은 작전능력, 기술기반, 산업생태계, 지휘구조, 민주적 통제, 국민적 신뢰까지 포괄해야 한다.

이 발제는 자주국방의 역사를 되짚되, 과거의 연표를 나열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역사 속에서 한국 국방이 어떤 제약을 받았고, 어떤 방식으로 선택권을 넓혀 왔으며, 오늘의 국방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주국방은 고립의 전략이 아니다. 자주국방은 한국이 동맹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정치적 역량을 갖추는 과정이다. 더 나아가 국민에게 충성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일이다.

발제의 핵심 명제는 분명하다. 자주국방의 핵심은 동맹의 약화나 해체가 아니라 한국의 판단력과 실행력을 키우는 데 있다. 한국이 스스로 위협을 판단하고, 필요한 능력을 준비하며,

위기 상황에서 책임 있게 결심할 수 있을 때 동맹도 더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자주국방은 감정적 구호보다 국가운영 능력에 가까우며, 그 성패는 무기 수량보다 지휘, 기술, 산업, 인재, 민주적 신뢰가 얼마나 정교하게 맞물리는가에 달려 있다할 것이다.

2. 한국 자주국방의 역사적 전개

한국 자주국방의 출발점은 6·25전쟁과 한미동맹의 형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해방 직후 한국은 독자적 군사력과 방위산업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군은 만들어졌지만 국가의 산업 기반, 지휘체계, 장비체계, 훈련체계는 모두 취약했다. 6·25전쟁은 이러한 취약성을 극단적으로 드러냈고, 전쟁 이후 한국 안보는 주한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축으로 재편되었다. 이 시기의 국방은 자율적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생존의 문제에 가까웠다. 국가는 살아남아야 했고, 군은 외부 지원 속에서 재건되어야 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의 한국 국방은 미국의 군사원조와 작전지휘 구조에 크게 기대었다. 전쟁 직후의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위체계를 갖추기에는 재정도, 기술도, 산업도 부족했다. 동맹은 국가 생존의 현실적 토대였다. 그러나 이 구조는 동시에 한계를 남겼다. 한국군이 스스로 판단하고 기획하며 지속적으로 전력을 발전시키는 역량은 충분히 자라지 못했다. 자주국방이라는 문제의식은 바로 이 의존 구조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1970년대는 자주국방 담론이 본격화된 시기였다. 베트남전 이후 미국은 동맹국의 방위 부담을 더 강조했고,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한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북한의 군사위협은 여전히 컸고, 미국의 안보공약이 언제나 같은 강도로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도 약해졌다.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은 이러한 불안 속에서 등장했다. 이 시기의 자주국방은 군사정책에 그치지 않았다. 중화학공업 육성, 방위산업 기반 구축, 국산 무기 개발, 군 현대화가 하나의 국가전략 안에서 추진되었다.

이 시기의 성과는 분명하다. 한국은 방위산업의 초기 기반을 만들었고, 군사력 현대화의 방향을 잡았다. 산업정책과 국방정책이 함께 움직이면서 한국은 최소한의 독자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계도 뚜렷했다. 기술 수준은 낮았고, 핵심 장비와 부품은 여전히 외부에 의존했다. 권위주의적 동원 방식은 민주적 통제와 국민적 합의를 충분히 수반하지 못했다.

따라서 1970년대의 자주국방은 오늘날 그대로 계승할 모델이라기보다, 한국이 안보 불확실성 속에서 산업과 국방을 묶어 선택권을 넓히려 했던 첫 번째 시도로 평가하는 편이 적절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군 현대화와 제도화가 국방정책의 중심에 놓였다. 경제성장이 축적되면서 국방비와 전력증강의 여력이 커졌고, 한국군은 장비 현대화와 방위산업 발전을 지속했다. 냉전이 끝난 뒤에도 한반도의 안보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 핵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자주국방의 내용은 더 복잡해졌다.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정보·감시·정찰, 미사일 방어, 정밀타격, 연합작전 능력이 점차 중요해졌다.

2000년대 이후 자주국방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깊이 맞물렸다. 전작권 논의는 정치적 상징성이 컸지만, 그 본질은 지휘권의 형식만이 아니었다. 한국군이 전시 상황에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수집·분석하며, 연합전력을 조정하고, 독자적 결심을 내릴 수 있는가가 문제였다. 전작권 전환은 반미의 문제가 아니며, 동맹 이탈의 문제도 아니다.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다.

2010년대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 빠르게 고도화되었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핵, 미사일, 특수전, 사이버, 무인기 같은 비대칭 역량으로 보완해 왔다. 북한 핵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파괴력만 높이는 무기가 아니다. 평시에도 한국 사회의 불안을 자극하고, 위기 시 한국과 미국의 결심을 흔들며, 제한적 군사충돌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 조건에서 한국군은 병력 중심, 지상군 중심, 선형 방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주국방의 무게중심도 병력과 장비의 양에서 감시정찰, 정밀타격, 지휘통제, 사이버·전자전, 우주자산, 미사일 방어로 옮겨가고 있다.

이 역사적 흐름이 보여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한국의 자주국방은 동맹을 부정하며 발전한 적이 없다. 한국은 동맹 속에서 살아남았고, 동맹 속에서 성장했으며, 동맹 속에서 독자능력을 키웠다. 자주국방은 동맹과 대립하는 말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동맹에 기대면서도 한국의 몫을 넓혀 온 과정이었다. 오늘의 과제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삼되, 한국군이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제도를 갖추는 것이 자주국방의 현실적 방향이다.

요컨대 한국 자주국방의 역사는 네 번의 중요한 문턱을 거쳐 왔다. 첫 번째 문턱은 전쟁과 동맹의 형성이었다. 6·25전쟁은 한국이 혼자서 생존하기 어려웠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었고, 한미동맹은 그 현실 속에서 만들어진 생존의 제도였다. 이 단계의 핵심 과제는 자율성 확대보

다 국가 존속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부터 한국 안보의 근본 질문이 생겼다. 외부 지원을 받더라도, 한국은 어디까지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다.

두 번째 문턱은 1970년대의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태동이었다.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한국에 동맹 불확실성이라는 현실을 각인시켰다. 한국은 그 충격 속에서 중화학공업 육성, 국산 무기 개발, 군 현대화, 방위산업 기반 조성을 한 묶음으로 추진했다. 율곡사업으로 대표되는 전력증강 노력도 이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자주국방은 기술 수준과 민주적 정당성 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한국이 국방을 산업과 국가역량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전환이었다.

세 번째 문턱은 냉전 종식 이후의 군 현대화와 북한 핵위협이었다. 냉전이 끝났지만 한반도에서 군사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북한 핵문제가 부상하면서 한국군은 재래식 방어를 넘어 정보·감시·정찰, 미사일 대응, 정밀타격,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역시 이 흐름의 일부였다. 지휘권의 명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전장을 보고 판단하며 연합전력을 운용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네 번째 문턱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첨단기술과 인구감소의 시대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되고, 전장은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으로 넓어지며, 병역자원은 줄어들고 있다. 이제 자주국방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병력을 유지하는가에 머물 수 없다. 한국군이 스스로 감시하고, 빠르게 판단하며, 정밀하게 타격하고, 장기간 버틸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졌다. 역사는 자주국방의 의미가 시대마다 바뀌었음을 보여주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위기 때마다 한국은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책임과 능력을 넓혀야 했다.

3. 변화한 안보환경과 자주국방의 새 조건

오늘날 한국의 국방은 북한만을 대비하는 전략으로는 충분치 않다. 한반도 안보는 동북아 세력균형,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의 군사적 부상,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일본의 방위력 증강, 중동과 해상교통로 위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 바뀌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면서 중국과 깊은 경제관계를 가진 국가이고, 수출입과 에너지 수입을 해상교통로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외부의 전쟁과 위기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곧장 영향을 미친다.

미중 전략경쟁은 가장 구조적인 변수이다.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중국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기술과 공급망을 둘러싼 경쟁도 계속된다.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핵심광물은 더 이상 산업정책만의 대상이 아니다. 군사력의 기반이자 동맹정책의 의제가 되었다. 한국은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연루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서 있다.

동맹 현대화는 한국에 기회와 부담을 함께 준다. 한미동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핵심 기반이며, 한국 방위의 현실적 토대이다. 그러나 동맹의 임무 범위가 한반도 방어를 넘어 역내 전략경쟁으로 넓어질 때 한국은 더 정교한 판단을 요구받는다. 방위비 분담, 역내 임무 확대, 공급망 협력, 첨단기술 표준, 우주·사이버 협력은 모두 동맹의 의제로 포섭되고 있다. 동맹은 강해질수록 한국의 역할도 커진다. 자주국방은 이런 조건에서 한국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불안은 현대전과 국제질서의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위성영상, 민간 통신망, 분산형 지휘체계, 탄약 생산능력, 산업 기반이 현대전의 효율성이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중동의 불안은 핵문제, 미사일, 프록시 전선, 해상교통로, 에너지 가격이 한꺼번에 변동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호르무즈, 홍해, 수에즈 같은 초크포인트가 위협받으면 전쟁은 지역에 머물지 않고 유가, 운임, 보험료, 물가, 공급망으로 파급된다. 한국은 이런 충격에 큰 영향을 받는 국가이다.

따라서 자주국방의 범위는 군 내부에만 머물 수 없다. 에너지 안보, 해상물류, 첨단산업, 방산 공급망, 연구보안, 국제기술협력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전쟁은 전장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휘통제망, 위성, 해저케이블, 항만, 전력망, 클라우드, 금융망, 여론공간이 모두 전쟁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 국방이 미래를 준비하려면 군사력 건설과 국가기술전략, 산업정책, 외교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이 변화는 자주국방의 목표도 바꾼다. 과거에는 적의 침공을 막기 위한 병력과 장비가 중심이었다. 지금은 감시하고, 판단하고, 타격하고, 방어하고, 복구하는 전 과정의 속도와 회복력이 중요하다. 누가 더 많은 병력을 갖고 있는가보다 누가 더 빨리 보고, 더 정확히 판단하며,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가 중요해졌다. 병력은 줄어들고 위협은 복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군은 기술과 조직의 전환을 미룰 수 없다.

4. 첨단기술과 국방과학기술 협력

전쟁 방식의 변화는 자주국방의 기술적 조건을 크게 바꾸고 있다. 오늘의 전장에서 전투력은 병력 규모와 중화기 수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감시·정찰 능력, 데이터 처리 능력, 지휘통제 속도, 무인체계 운용, 사이버·전자전, 정밀타격 능력이 전투의 흐름을 좌우한다. 드론과 무인체계는 낮은 비용으로 정찰, 표적획득, 통신중계, 자폭공격, 심리전까지 수행한다. 고가의 플랫폼만으로 전장을 지배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든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정보를 분류하고, 이상 징후를 탐지하며, 지휘관의 결심을 지원한다. 전투에서 속도는 생존과 직결된다. 정보가 들어오고, 판단이 이루어지고, 명령이 전달되고, 타격이 수행되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전투력은 높아진다. 한국군이 인공지능 기반 지휘통제체계와 자동화된 감시·정찰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다면, 장비를 보유하고도 실제 전장에서는 뒤처질 수 있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도 자주국방의 핵심 축으로 올라섰다. 위성은 적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통신을 유지하며 정밀타격의 기반을 제공한다. 사이버전은 적의 지휘체계와 기반시설을 흔들 수 있고, 전자전은 드론과 미사일, 통신망의 기능을 제약할 수 있다. 미래전은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영역까지 포괄하는 전영역작전으로 전개된다. 이 영역에서 한국군이 독자적 감시와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첨단 무기의 효과도 제한된다.

그러나 기술 장비를 도입하는 일과 기술군으로 바뀌는 일은 다르다. 드론을 구매하는 것만으로 드론 중심의 작전개념이 생기지 않는다. 인공지능 체계를 들여오는 것만으로 지휘관이 데이터를 신뢰하고 활용하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첨단기술은 군 구조, 교리, 법제도, 인력양성, 획득체계, 시험평가, 보안체계가 함께 바뀔 때 전투력으로 바뀐다. 따라서 첨단국방은 장비사업보다 군 전체의 운영원리를 고치는 개혁에 가깝다.

한국은 기술군 전환에 필요한 상당한 기반을 갖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로봇, 방산 분야에서 한국의 산업역량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 방산은 빠른 납기와 비용 대비 성능을 바탕으로 국제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문제는 민간과 산업의 혁신 속도가 군의 소요제기, 연구개발, 획득, 시험평가, 배치 속도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민간에서 이미 가능한 기술이 군 내부로 들어오는 데 지나치게 긴 시간이 걸린다면, 산업역량은 전투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국방과학기술 국제협력도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과거의 국제협력은 무기 도입이나 기술 이전의 부수적 수단으로 이해되기 쉬웠다. 이제는 동맹 현대화, 억제력 강화, 공급망 회복력, 첨단기술 확보, 방산 협력, 표준과 데이터 공유를 함께 다루는 핵심 국방외교가 되었다. 최근 한미 국방협의 채널에서 우주, 사이버, 공급망, 정비협력, 인공지능과 자율체계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 것도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

국제협력의 관건은 협력의 수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어떤 기술을 국내에서 반드시 확보할 것인지, 어떤 기술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파트너와 공동개발할 것인지, 어떤 분야는 대학과 스타트업의 개방형 협력을 활용할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국방반도체, 핵심 센서, 일부 알고리즘과 소자처럼 전략적 의존이 위험한 분야는 독자 기반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유·무인복합체계, 차세대 통신, 지향성 에너지, 우주·사이버 분야는 비용과 속도를 고려할 때 동맹형 협력이 유리할 수 있다. 시험평가 도구, 일부 응용 소프트웨어, 비민감 이중용도 기술은 더 넓은 국제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술협력이 깊어질수록 연구보안과 기술보호의 중요성도 커진다. 협력은 개방을 요구하지만, 국방기술은 무분별한 개방을 허용하지 않는다. 신뢰 가능한 파트너와 안전하게 협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외국 연구자 참여, 데이터 접근등급, 민감기술 분류, 수출통제, 비밀정보보호, 기술유출 대응 절차가 정교해져야 한다. 보안은 협력을 막는 장벽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보안이 갖춰져야 더 깊은 협력이 가능하다. 앞으로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은 더 많이 만나는 외교보다 더 선별적이고, 더 깊고, 더 안전한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

5. 한국 국방의 네 가지 방향

앞으로의 한국 국방은 튼튼한 국방, 첨단 국방, 효율적인 국방, 명예로운 국방이라는 네 방향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 네 가지의 개혁 방향은 상호 정합적이다. 동맹과 독자능력은 튼튼한 국방의 토대이고, 인공지능·무인체계·우주·사이버 역량은 첨단 국방의 중심이다. 병력감소와 재정 제약을 고려한 조직개편은 효율적인 국방의 과제이며, 정치적 중립과 복무 매력 회복은 명예로운 국방의 조건이다. 네 방향의 과제가 함께 추진될 때 국민주권 국방이라는 목표가 현실성을 갖는다.

첫째, 튼튼한 국방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한국군의 주도적 책임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한미동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핵심 기반이며, 한국 안보의 현실적 토대이다. 그러나 동맹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안보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한국군은 독자적 감시정찰, 지휘통제, 미사일 대응, 정밀타격,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계속 보완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선언이나 정치적 상징으로 끝날 수 없으며, 구체적 능력과 검증체계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조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기한 미루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조건을 채우는 로드맵을 만들고, 한국군이 주도적 책임을 감당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둘째, 첨단 국방은 병력감소 시대의 필수 과제이다. 한국은 인구감소와 병역자원 축소를 피할 수 없다. 같은 방식으로 병력을 유지하려는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감시·정찰·경계·병참·화력지원 등 무인화가 가능한 분야부터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접적지역 경계작전도 고정 병력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반 감시체계와 기동형 초동조치 부대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병력이 줄어드는 시대에 인력을 더 위험한 곳에 더 오래 붙잡아 두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다.

예비전력 개혁도 첨단 국방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기존의 예비군은 유사시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미래전에서 예비전력은 상용 드론, 센서, 통신장비, 사이버 역량을 활용하는 비대칭 전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민간에 축적된 기술과 숙련을 예비전력으로 끌어들이면, 제한된 병력으로도 더 넓은 공간을 감시하고 방어할 수 있다. 예비전력 개혁은 동원제도 손질에 그치지 않고 총체전력 차원의 군사혁신으로 다뤄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국방은 군이 전투임무에 집중하도록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다.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시대에 군인이 수행할 필요가 낮은 교육, 행정, 복지, 시설관리, 일부 군수지원 기능까지 군 내부 인력으로 유지하는 방식은 부담이 크다. 군은 군인이 해야 할 일과 민간·군무원·전문기관이 맡을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 물론 문민화와 아웃소싱에는 보안, 전시 지속성, 책임성 문제가 뒤따른다. 그러나 이런 위험을 이유로 모든 기능을 군 내부에 포함해 두면 더 큰 비효율이 생긴다. 전투준비와 작전수행에 현역 인력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

군 구조 역시 합동성과 미래전 수행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한국군은 오랫동안 지상군 중심, 병력 중심, 각 군 중심 구조에 익숙했다. 미래전은 각 군이 따로 싸우는 방식보다 모든 영

역의 전력이 실시간으로 통합되는 방식에 가깝다. 육·해·공군뿐 아니라 해병대, 사이버, 우주, 특수전, 정보, 전자전 역량이 하나의 작전구조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전략군 또는 그에 준하는 미래전 수행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기능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장거리 정밀타격, 우주·사이버·전자전, 특수작전, 해외위기 대응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휘구조가 필요하다.

넷째, 명예로운 국방은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군은 명령과 복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지만, 그 원리가 반민주적 문화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는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군 정보기관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군 내부의 권한 집중과 폐쇄적 인사운영은 민주적 통제 아래 놓여야 한다. 장병과 간부에게 헌법, 민주주의, 시민적 통제의 의미를 교육하는 일은 형식적 교양교육이 아니다. 군의 정체성을 세우는 핵심 과제이다.

군 복무의 명예와 매력을 회복하는 일도 중요하다. 간부 충원과 유지가 어려워지는 이유를 급여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젊은 세대가 군을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미래가 있는 조직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수 인재는 군을 선택하지 않는다. 초급간부 처우 개선, 직업 안정성 강화, 전역 후 교육·취업·금융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군 내부에서 능력과 전문성이 존중받고, 부조리와 폐쇄성이 줄어들며, 장병이 자신의 복무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기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명예로운 국방은 전투력과 떨어져 있지 않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군대는 강할 수 없다.

6. 국민주권 국방과 자주국방의 미래

자주국방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드러난다. 한국은 위기 때마다 외부 지원에 기대면서도 스스로의 몫을 조금씩 넓혀 왔다. 6·25전쟁 이후에는 생존이 최우선이었고, 1970년대에는 미국의 안보공약 불확실성과 북한 위협 속에서 방위산업 기반을 만들었다. 냉전 종식 이후에는 북한 핵문제에 대응하는 군 현대화가 필요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전작권과 한국군의 주도적 작전능력이 주요 의제가 되었다. 오늘날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미중 전략경쟁, 첨단기술, 공급망, 병역자원 감소, 군의 민주적 정체성이 모두 자주국방의 조건을

바꾸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국민주권 국방이라는 관점이 중요하다. 국방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의 자기보존 논리가 될 수 없다. 군은 국민의 생명과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주권 국방은 군이 국민에게 충성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으며, 국민의 자원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답게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는 국방이다. 강한 군대와 민주적 군대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래전에서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보다 개방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이 더 강하다. 첨단기술을 받아들이는 군대는 외부와 협력해야 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는 군대는 특정 출신과 특정 군의 독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군대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칙 위에 서야 한다.

자주국방의 미래는 세 가지 능력에 달려 있다. 첫째는 판단능력이다. 한국은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스스로 분석하고, 동맹과 주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식별해야 한다. 둘째는 실행능력이다. 한국군은 독자적 감시정찰, 지휘통제, 미사일 대응, 정밀타격, 사이버·전자전, 우주자산, 해상교통로 보호, 위기대응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는 지속능력이다. 전쟁과 위기는 하루 만에 끝나지 않는다. 탄약, 부품, 정비, 보급, 에너지, 통신, 국민적 지지, 경제 회복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 세 능력이 갖춰질 때 자주국방은 구호에서 제도로 바뀐다.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은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맡는다. K-방산의 성장은 한국 국방의 기회이다. 수출이 늘면 생산라인이 유지되고, 단가가 낮아지며, 해외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성능개량이 쉬워진다. 그러나 방산수출 실적만으로 자주국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 센서, 반도체, 알고리즘, 정비체계, 연구보안이 취약하면 외형적 성과 뒤에 의존 구조가 남는다. 방산수출은 자주국방의 성과이자 수단이어야지 목적 그 자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국방과학기술 국제협력도 같은 기준에서 보아야 한다. 모든 기술을 국내에서 혼자 개발하겠다는 생각은 현실성이 낮다. 반대로 모든 핵심기술을 외부 협력에 맡기는 것도 위험하다. 무엇을 독자 확보할지, 무엇을 동맹과 공동개발할지, 무엇을 개방형 협력으로 추진할지 구분해야 한다. 협력의 성과도 MOU 체결 건수나 포럼 개최 횟수로 평가해서는 부족하다. 공동개발 과제, 공동시험, 공동정비, 표준·인증 상호인정, 군 운용 반영 속도, 공급망 다변화 효과를 보아야 한다. 앞으로의 국방외교는 기술협력 자체가 외교가 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자주국방은 혼자 모든 것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자주국방은 한국이 스스

로 위협을 해석하고, 필요한 군사능력을 준비하며, 동맹과 국제협력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동맹은 여전히 한국 안보의 핵심 토대이다. 그러나 동맹이 강할수록 한국의 책임도 커진다. 한국이 더 정확히 판단하고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을 때 한미동맹도 더 신뢰받는 억제체계가 된다.

앞으로 자주국방의 기준은 병력의 규모나 무기 도입 건수에 머물 수 없다. 핵심은 통제 가능한 능력이다. 한국이 핵심 감시정찰 자산과 지휘통제 능력, 정밀타격과 미사일 대응능력, 사이버·전자전과 우주자산, 탄약·부품·정비·보급의 지속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 협력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수출 실적, 협의체 수, 양해각서 건수보다 실제 전력화 속도와 공급망 회복력, 핵심기술 보호능력이 더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국민주권 국방은 자주국방의 현대적 표현이다. 군은 국민의 세금과 장병의 헌신, 산업의 역량과 과학기술의 축적 위에서 운영된다. 따라서 강한 군대는 국민과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헌법에 충성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민주적 통제와 전투력은 서로를 약화시키는 관계가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군대가 더 오래 버티고, 더 좋은 인재를 끌어들이며, 더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지금 한국 국방에 필요한 것은 부분적 조정에 머물지 않는 방향 있는 대전환이다. 동맹에 기대어 안보를 소비하는 군대에서 동맹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군대로, 병력 규모에 기대는 군대에서 기술과 합동성으로 싸우는 군대로, 폐쇄적 관행에 머무는 군대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적 군대로 나아가야 한다. 자주국방은 과거의 구호를 되살리는 데 머물지 않고 미래의 전쟁과 민주주의에 맞는 군대를 만드는 일이다. 한국 안보의 최종 책임은 한국 자신에게 있다.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군대, 국민에게 충성하고 국민이 존중하는 군대가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해야 할 자주국방의 미래이다.

종합토론

【토론자】

김종대 (前 국회의원)
김기섭 (군사편찬연구소장)

제15회 KWO 나지포럼

역사로 본 자주국방

발 행 인 김낙진

발 행 일 2026년 6월 26일

발 행 처 전쟁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 02. 709. 3174

편집위원장 서원주

편 집 위 원 서진아, 이재헌, 백연주, 이정선, 강지형, 황다혜, 황은하

제 작 도서출판 온샘

* 이 자료집의 저작권은 전쟁기념관에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전쟁기념관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The War Memorial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